

영상포교 포기 할것인가

경영상으로 가늠이 어려운 불교 TV(사장 허문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허문도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8월 3일부터 농성에 들어간 불교TV노동조합(위원장 윤상호)은 부분파업을 거쳐 18일 오전10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허 사장은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비조합원 방송요원을 가동하며 재방송 및 광고를 중심으로 긴급 편성해 방송하고 있는 상태다.

불교TV, 노조총파업...직장폐쇄

사장 퇴진론·불가론 놓고 양보없는 대치 이사회 소극적 태도 일관...중재안 절실

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는 노조의 총파업에 대응한 사측의 유일한 정당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며 자신의 퇴진 운동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허 사장은 "노조가 총파업을 하고 언제든지 정당한 업무에 복귀하면 직장폐쇄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며 직장폐쇄기간중 비노조원을 투입해 기존의 재방송 체계를 지속할 것이며 중요한 교계의 법회 및 행사 등은 생방송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허 사장은 "금호전기 빌딩 임대료와 하나은행 부채 등은 분할 상환을 통해 해결하도록 실무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투자자들도 2명 정도 설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언급했다.

●노조의 시각

사측의 직장폐쇄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져 있는 불교TV 회생 방안 마련을 위해 준비 투쟁중인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이에 강력히 맞서 가두시위를 하는등 허사장퇴진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노조위원장은 "허사장이 불교TV에 남아 있는 한 투자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원하지 않는다"며 "허사장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불교TV를 위해 퇴진하는 것만이 회사를 살리는 대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청주 실업인 채모씨 등 3명의 불자 실업인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또



◇불교TV는 19일 낮 12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진은 22일 불교TV노조의 가두시위농성 장면.

이들에게 허사장 퇴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사회의 반응

30명의 이사진들은 직장 폐쇄 4일째인 22일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사회를 소집해도 5~6명 정도만 참석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와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전면파업과 직장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재방송 편성으로나마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송출마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최대의 수입원인 광고 수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사갈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사회가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노조를 비롯해 교계 일각에서는 현 상황과 같이 끈이 끊어질 노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참구는 이사회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조가 교섭종인 3명 외에 허사장이 최근 자신이 2명의 투자자 영입을 추진하고 있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새로운 투자 가능성이 더욱 넓어진만큼 이사회가 중재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앞서 노사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투자자 영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해 노사화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불교TV가 문을 닫을 경우 그 책임은 불교 전체의 몫이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현재의 구성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opia.com)

총무원 움직임

위원장 행정행위 소급 유효결의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은 20일 교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후 종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밝혔다. 원택스님은 "지난 6~7월 경남지역 본말사주지 연수에 140여명이 참석했다. 21~22일 전남북 본말사주지 연수에 이어 29~30일 제주지역 본말사주지 연수도 열린다. 17일 구족계 수계살림도 원만히 회향했다. 이번 사태로 각 부서의 사업은 잠시 유보된 상태이나 총무행정은 정상적이다"고 말했다.

총무원장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가 난립해 인신공격하는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하는 소리가 많다. 불교자주권을 부르짖는 마당이니 조용히 치러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15일 총무원회에서 29대 총무원장이 행한 제반 행정행위에 대한 소급 유효확인을 결의했다. 총무원은 이 날자로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 명의로 총무원회의 결의사항을 공고했다. 소급 유효확인을 결의한 내용은 △본말사 주지 임명 등 인사행정 △총무원회의 의결행위 △총회에 안건 상정 요청 행위 △재무행정 등이다.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항소에 따라 '소송계류 증명원'이 발급됐다는 정화회의의 주장에 대해 법통수호대책위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소송계류증명원은 항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일 뿐,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적법한 항소가 계류중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는 전혀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총무원은 20일 정화회의측이 서술지법에 낸 '임시총무원장 선임신청' 소장에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직무대행자 선임의 효력도 소멸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며 "직무대행에 대한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화회의는 총무원의 자작극이라고 비난하다가 임시총무원장 선임신청을 취할 뜻이 있다고 반복했다. 정성운 기자

정화회의 움직임

소송계류 증명원 발급 "직대유효"

○...정화회의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일 정영스님이 제출한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 항소 6부에 배당했다"고 주장했다. ○...정화회의는 17일 통도사에서 신도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산대제에서 "폭력종파와 10.12 폭력·납치·고문사건 수사 촉구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결의했다.

○...정화회의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11월 15일 총무원장 선거는 고산스님에 의해 불법임명된 사람들만의 선거로 원천적으로 불법무효"라면서 "징계자체가 명백한 원인무효에도 불구하고 이젠 '재심사' 하겠다는 것은 고도의 교란 및 기만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정화회의는 19일 "오늘 오후 4시45분경 보명, 무덕, 본연스님 등 3명이 조계사 건너편 불교백화점에서 불구를 고르고 있던 중 갑자기 총무원측 승려 10여명과 용역회사 직원 20여명이 왕복 6차선의 우정국로를 건너와 세 스님을 무차별 폭행하고 두 스님을 조계사로 납치, 소지품을 빼앗고 30여분간 감금해 둔 채 집단폭행을 가하다가 11시에 납치신고를 하자 폭언을 하며 풀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정화회의는 21일 "서울고법 민사항소 6부는 원고측(정영스님)의 항소를 받아들여 심리중임을 확인하는 소송계류증명원을 발급했다"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본안 확정 판결을 내릴 때까지 도견 총무원장 직무대행의 지위와 권한에는 전혀 변동이 없음을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jkim@buddhopia.com)

●허문도사장의 입장

허문도사장은 19일 직장폐쇄 단행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송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냈다는 생각이

조선왕조 말기 최대의 지성인 박지원(朴知源)과 홍대용(洪大容), 박제기(朴齊家) 등은 공통적으로 과거 함격자가 아니었다. 전제도 틀에 박힌 학문에 매여 있으면 어김없이 머리가 경직화되고 마는데 이들은 시험에 매여 있지 않았으므로 유연한 사고력으로 자신의 호기심에 따라 지적 대상을 골랐던 것이다. 특히 박지원은 시인, 과학자, 문화인류학, 비교문화에 날카로운 시야를 지니고 있었다. 그가 중국의 무신(魯迅)에 못지 않은 비판정신과 F. 베이컨(Bacon)에 못지 않은 유토피아의 꿈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 정신이 시험에 오

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중국 최대 문학작품인 <서유기>, <삼국지>, <수호전> 등은 원말에서 명초에 이르는 기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일시적으로 과거시험이 중단된 시기였다. 당시 중국의 수재들은 틀에 박힌 과거공부에서 해방되자 마음껏 자신의 상상력을 펼치고 왕성한 지적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조선왕조 이래 우리의 학문 전통은 시험(과거)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장원급제'가 이상이었으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인생,

인격, 행복... 등의 모든 것이 오직 시험 하나로 결정된다는 미신이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말지 않아 연중행사의 하나인 수능시험이 실시되고, 전국민의 관심과 고교교과목과 그 학부모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의 규격화된 시험으로 평생을 결정한다는 데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고 있다. 꼭 막힌 입시제도가 가능성 많은 청소년들의 꿈을 가두어 놓는 족쇄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듯 하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입시방법을 다양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더욱 더 다양한 전형제

도의 마련을 바란다. 나라와 겨레의 미래는 '꿈'을 꾸는 청소년들에게 있다. 기성세대는 21세기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어떤 꿈을 갖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을 좇아나 출세보다는 원대한 꿈을 키워가는 일이다. 인류의 빛나는 모든 업적들이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란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본지논설위원)



목어 시험제도와 꿈

중범우선이나 정관우선이나

'사퇴촉구 결의' 중회안건 상정

동국학원 이사회가 19일 이사회를 열어 조계종 파견 이사 5명을 선임하고 녹원스님을 이사장으로 재선출한 데 대해 즉각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20일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정기총회에 동국학원 이사 사퇴 촉구서 및 동국학원 이사 추천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19일 이사회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총회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총림학교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후보를 선임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도 총회에서 동국학원 이사 재선임을 안건으로 채택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물론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해서 총회 전체의 뜻은 아니다. "총회에서 이사후보 추천동의를 하지 못했으므로 이사 선임은 이사회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중

동국학원 이사선출 '진통'

회의원들도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총회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총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볼 경우 19일 이사회회의 결정은 많은 총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회내 총책모임인 일여회와 청림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녹원스님 이사장 선출 취소 △승려 이사 총사퇴 △동국학원 정관에 이사선임시 종단추천 명문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동국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이사회회의 결정은 재단의 독선적인 판단과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혀 학내분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국학원 이사회는 총림학교관리법에 따라 이사 후보 추천과 중앙총회의 동의를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는 처지였다. 동국학원정관에 따라 1개월 전에 교육부에 취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제때 이사 취임 승인을 못할 경우 이사회 공백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사회가 끝난 직후 송재운 법인사무처장은 "일찍이 이사회를 열어 야 했으나 종단의 사정을 감안해

기다려왔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동국학원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번엔 선임한 이사의 임기는 11월23일부터 시작된다.

또 총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총림학교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후보를 고려한 선임의 방법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종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어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법인사무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도 "동국학원은 종단에서 세웠으므로 중범과 총회의 의견이 존중됐으면 좋겠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총회에서 동국학원 이사 사퇴 촉구 결의와 이사후보 추천 동의를 안건으로 상정해놓은 상태에서 총회 일부와 동국학원 이사회간에 중범 우선성이나, 정관 우선성이나를 두고는 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회내 총책연구모임인 청림회와 일여회에서 지난 8월 이사장 녹원스님의 3선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이사장 퇴진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담 화 문

- 제 30대 총무원장선거에 즈음하여 -

1999. 10. 1. 서울지방법원 제42민사부의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판결과 중앙총회의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제 30대 총무원장선거는 작금의 종단 혼란을 극복하고 청정승가(淸淨僧家)의 화합과 번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중인·중범에 의한 어법한 총무원장선거

본 좋은 창종(創宗)이래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 끝에 지켜내고 계승해온 자랑스러운 중원과 중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원·중범 이야말로 사부대중의 총의(總意)를 모은 종단 내부의 최고 규범이며, 중원과 중범을 지키고 수호하는 것은 중도로서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단의 최고 행정 소임자를 선출하는 급번 총무원장 선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원과 중범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중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총무원장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원·중범에 의하지 않는 선거관련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그 누구라도 중도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중원과 중범에 의한 어법한 총무원장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종단 화합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총무원장선거

선거는 상호비방과 무원칙한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화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 종단 화합의 새로운 전기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며, 급번 제30대 총무원장선거를 이러한 종단 화합의 새로운 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거 결과에만 집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선거의 전과정에 걸쳐 성숙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종단 화합의 대원칙 속에서 선거를 바라보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제30대 총무원장선거는 이전만 중도 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사회가 지켜보고 있

다는 점을 인식하여 달라진 불교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중책 제인을 통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급번 제 30대 총무원장선거는 중책 제시와 건전한 비판, 민주적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은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단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입니다. 바로 이 첫걸음은 비록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만의 몫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과 개인 이해에서 벗어나 진정 21C를 불국정토(佛國淨土)로 힘차게 열어나갈 종단의 소임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입후보자도 타후보자에 대한 비방보다는 올바른 중책 제안과 토론을 통하여 선거가 단순한 경쟁이 아닌 승가 고유(固有)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급번 제 30대 총무원장선거는 종단 혼란을 극복하고 21C 를 맞이하여 변화된 새로운 종단의 모습을 구현할 중요한 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된 입장에서 제30대 총무원장선거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입후보자와 선거인단도 중원과 중범을 준수하여 승가(僧家) 고유의 전통을 살리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흥미위주가 되지 않도록 각급 언론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 드립니다.

불기 2543(99)년 10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덕 운